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패 모든관행 바뀌 공정사회 완성하자”

文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긴장 풀려… 집권 후반기 더 중요
불법사금융 등 초기 강력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느슨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총체적으로 향상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뀌어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OIE 조류인플루엔자 표준실험실’ 인증

검역본부, 총 8개 실험실 보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지난 16일 ‘OIE 조류인플루엔자 표준실험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OIE 온라인 투표는 지난 5월 개최 예정이던 제88차 OIE 총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주요 안전에 대한 회원국의 온라인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이로서 검역본부는 지난 2009년 소브루셀라병을 시작으로 뉴캐슬병(20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2012), 광

견병(2012), 일본뇌염(2013), 구제역(2016), 살모넬라증(2016)에 이어 모두 8개의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아시아 권역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OIE 국제표준실험실을 보유하는 것이다. 중국은 19개, 일본은 11개 질병에 대한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기관도 포함돼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전파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전파특성으로 원헬스(One Health) 기반 질병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상임위원장 18석 다 가져가라” 통합당 초강수

뜨거운 감자 앞에 둔 與 ‘속얹이’

“추경심사·안보대응 등 현안 산적
정상적 활동으로 당 입장 개진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 진의 파악에 나서려는 한편, 추가 협상을 위한 만남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10여분 간 머물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이자 선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은 민주당에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7개를 (통합당에) 배정했다지만 우리가 받을 것 같다. 18개 상임위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해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역제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이 민주당 몫이 되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타격받을 수 있다. 야당에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관련 질문에 “그런 논의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하신 것의) 진의가 의회 독재를 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장님이 네가 부장해라, 그러면 내가 부장할게요’라고 답변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 않다”며 “진심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만 서민의 눈물,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보다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심사, 안보 대응을 위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 /최영훈 기자

靑 “불탄 회고록, 사실관계 확인 없어… 부적절한 행태”

정의용 “자신 관점에서 본 것 밝혀
상당부분 사실 크게 왜곡하고 있어”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한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지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며 볼턴 전 보좌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담긴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회고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

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대북외교 이슈를 언급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장문은) 어제(21일) 저녁 미국 NSC에 전달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가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대해 직접 나서 대응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대응이라기보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 볼턴의 카운터파트였다. 정 실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 실장이 입장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최영훈 기자

구매대행 인기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부, 구매대행 중지 명령

물놀이 튜브나 전동킥보드 등 국내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기준을 조사해보니, 절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동안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 여름철을 맞아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 물놀이용 튜브는 조사대상 5개 모두 내구성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에선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 두께 기준에 미달했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한용수 기자 hys@